

고의·상습 체불기업에 대해 6개 지방노동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착수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5.8.(수) 10시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·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*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「특별근로감독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* 음식점업(1개소), 물류업(1개소), 건설업(1개소), 가스충전업(1개소), 병원(2개소), 주택관리업(1개소)

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,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.

이번 특별감독 대상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(* 세부 내용은 ‘붙임’ 참조)

먼저, ㄱ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.

다음으로, ㄴ요양병원은 “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”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.

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.

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,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.

이정식 장관은 “향후에도 업종·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하창용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최충운 (044-202-7528) 강송훈 (044-202-7531)
	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책임자	과 장	김용현 (02-2250-5862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손인범 (02-2250-5870)
	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	책임자	과 장	김철수 (02-950-9730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김면주 (02-950-9863)
	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책임자	과 장	신기원 (032-460-4660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함지희 (032-460-4665)
	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책임자	과 장	최태식 (051-850-6461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고성은 (051-850-6464)
	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책임자	과 장	장정희 (053-667-6287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정우성 (053-667-6285)
	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책임자	과 장	장영욱 (062-975-6376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정찬섭 (062-975-6371)
	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책임자	과 장	이재환 (042-480-6280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한상미 (042-480-6231)

- ① (서울 강남 소재, 음식점업, 약 100명) 서울 강남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고, SNS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*을 공개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

*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 과시, 명품 쇼핑, 고가 외제차량,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최근까지 수시로 공유

☞ '23년 이후 현재까지 320여건(약 15억)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

- ② (서울 강북 소재, 물류업, 약 17명) 주로 최저시급의 근로자들의 근무 마지막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유사 사건이 지속 제기

☞ '23년 이후 현재까지 85여건(1.1억)의 사건이 지속 제기 중

- ③ (경기 남양주 소재, 건설업)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(기성금)을 지급받고도 “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” 등 핑계를 대며 전국 여러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여 사건이 지속 제기

☞ '23년 이후 현재까지 145여건(약 10억)이 넘는 사건이 지속 제기 중

- ④ (부산 소재, 가스충전업, 약 30명) 부산 소재에 6개의 가스충전소를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연차유급휴가수당, 연장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

☞ '23년 이후 현재까지 10여건이 넘는 사건이 제기중

- ⑤·⑥ (대구 소재, 요양병원 2개소)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,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 제기

☞ 2개소 모두 '21년, 23년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중

- ⑦ (광주 소재, 인력공급업, 약 170명) 건물관리업(경비, 청소 등)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용역 대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면서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사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신고사건이 지속 제기

☞ '23년 이후 현재까지 21여건(6.3억)의 임금체불 사건이 지속 제기 중